

【 2015.02.26(목) 강원일보 】

올해 건설물량 4조 ... 상반기에만 80% 풀려

오늘 공사·설계 발주계획 설명회

올해 도내 건설분야에 4조여원이 풀린다.

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26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2015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와 18개 시·군을 비롯해 도 교육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LH 강원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강원지방조달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발주 예정인

건설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올해 발주 예정 공사는 58개 기관에서 3,436건이다. 사업비는 건설공사 3조8,728억원, 설계용역 1,667억원 등 총 4조3,995억원으로 집계됐다.

18개 시·군이 총합 2조2,6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781억원, LH 강원지역본부 3,954억원, 도 2,691억원, 도 교육청 1,316억원 등이다.

도는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만 전체 발주계획의 80.8%인

3조2,643억원(3217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설명회 전에는 강원지방조달청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시책 및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올해 수주전략과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매년 4조원이 넘는 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이 안내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정동기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장은 26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2015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 계획 설명회'를 개최.

【 2015.02.26(목) 강원도민일보 】



◇정동기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26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에서 '2015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영월 '불량 레미콘' 업체 이번엔 장비대금 체불

2억5000만원... 장비업체대표 32명 농성 돌입

속보= 영월군과 LH강원지역본부가 건립 중인 영월읍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기초공사 과정에서 불량 레미콘이 타설돼 철거 소동(본지 1월 23일자 5면)을 빚었는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장비 사용대금이 체불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건설기계 영월연합회와 LH강원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동천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우진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장비대금 1억2000여만 원을 체불했다는 것.

또 자재비와 유류대 등을 포함하면 체불금액은 2억5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현장에 투입됐던 장비업체 대표 32명은 영월경찰서에 집

회신고를 내고 현장 바로 옆 동강제방도로에서 공사를 중단한 채 지난 23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연합회 차원의 대규모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기초인 PIT 층에 타설된 불량 레미콘 철거 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

는 등 공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 3월 완공과 함께 입주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영월군은 설 이전과 23일 LH와 동천건설 관계자를 만나 빠른 해결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천건설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인 우진건설측에 중장비 사용대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우진건설과는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공동도급사 대표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지방공기업, 공사계약때 '하도급사 끼워넣기' 여전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 소속 공기업이 공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뇌물·향응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초 발표한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상위인 1등급을 받은 인천도시공사마저 하도급 업체를 알선한 비위로 도마에 올랐다.

건설업계는 "건설산업 내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남용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공사에서 건설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원사업자나 입찰경쟁마저 참여할 수 없는 협력사 모두 피해를 입는다. 안전과 품질도 놓칠 수 있다"면서 "건설업계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도 발주처의 잘못된 관행이 모든 것을 망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이른바 '갑질 횡포'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인천도시공 등 발주처 우월적 지위남용
인천시 감사관실은 25일 인천도시공사 공무원이 자체 시행하는 공사를 맡은 원사

업자에 하도급 업체를 알선해온 비위를 적발, 해당 공무원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시공사 관리2급 A씨는 2011년 9월부터 도시공사 구월사업처장, 주력사업처장 등을 역임하면서 동구 민석윌카운터와 남구 도화행정타운 등 공사를 맡은 원사업자에 하도급 업체를 소개했다.

A씨가 원사업자에 하도급 업체를 소개한 건수는 총 16건에 달하며, 공사를 실제 수행한 하도급 업체는 4곳으로 집계됐다.

도시공사는 감사관실 통보에 따라 27일 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남양주시에서는 4급 공무원이 33억 원 규모의 상하수도관 매설 공사를 낙찰받은 원사업자 관계자를 불러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라고 요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실도 감찰반을 파견해 유범 사항을 검토했다.

당시 B씨가 추천한 하청업체는 원사업자와 계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설계 도면을 갖고 있어 유착관계를 의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받고 특정업체에 특혜 원사업자는 업체관리 어렵고 하도급사는 입찰기회 빼앗겨 정부 '갑질 횡포 대책' 주목



최남해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2013년 충북 청주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착비리 발생 빈도가 높은 행정 분야를 건축도시(구성비 26.9%), 건설부문(26%)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비리로는 계약비리(29.9%)가 가장 많았고, 인허가비리(20.6%)와 인사비리(13.7%), 공사비리(10.1%) 등이 뒤를 이었다.

원청 하청 모두 손실... 지역경제 악영향이 같은 공무원 비리의 피해는 결국 건설업계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원사업자는 지역 내 건설한 업체 선정에 기반을 한 안전-품질 향상과 입찰경쟁에 따른 원가절감 실효성을, 다른 하도급업체는 입찰참여기회조차 빼앗기기 때문이다.

특히 원사업자는 공무원이 추천한 하도급업체가 제대로 시공을 못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하자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방의 C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하도급 대금을 요청하거나 설계변경도 없었던 공사에서 애초 계약

금 이외의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이를 거절하면 공무원 등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하는데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하도급을 주는 일도 있고, 마무리한 뒤에는 하자보수가 되지 않는 웃지 못할 일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계약 비율을 50~70%로 권장하는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내 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주지원이 결국 자생력 상실과 폐업파탄파니를 양산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이자, 공무원 비리를 양산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5일 지역업체 우대조례 등을 규제기요단(단두대)으로 규정한 상태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는 개선돼야 한다.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수주)물량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행위다. 또 물량이 없다고 공무원들 등에 업을 맨 결국 자생력을 잃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건협, 각 시도회 2014년도 실적신고 집계 결과

건설공사 계약·기성액은 증가세... 토목은 부진 지속

총청권 건설 경기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의 2014년도 실적신고 집계 결과에서도 지역별 계약금액 및 기성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공공발주 비중이 절대적인 토목부문 실적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축부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열세가 컸다. 이렇다 보니 공공 의존도가 큰 중소업체들과 실제 상위업체들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투자와 더불어 중소지역사들을 위한 일감 발굴 및 입찰 참가기회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ang@**

기성, 소폭 감소했지만 4조원대 유지

충남

충남지역 건설사들의 실적은 지난해에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건협 충남도·세종시회(회장 박해상)가 회원사별 지난해 실적신고 집계 결과, 전체 계약금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기성금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계약금액은 3조6854억800만원 규모로 전년도 3조6024억2900만원 대비 2.3%(829억7900만원) 늘었다. 토목과 산업환경 부문 계약액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건축과 조경이 상승세를 이뤘다.

토목 계약액이 1조2579억8500만원에서 1조2222억9300만원으로 줄어든 반면 건축은 2조207억7000만원에서 2조2172억7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산업환경 계약액 역시 2684억3700만원에서 1701억5200만원으로 줄었지만 조경 부문은 552억3700만원에서 756억9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성액은 2013년 4조1046억4400만

원에서 지난해 2%(765억7400만원) 가까이 줄었지만 4조280억7000만원으로, 4조원대는 유지했다. 기성액 역시 토목 부문은 1조6499억7500만원에서 1조3751억27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건축이 2조1160억4300만원에서 2조2717억300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감소폭을 줄였다.

업체별로 보면, 계약실적의 경우 경남기업과 극동건설, 도원엔지니어링이 전년도와 같은 1, 2, 4위를 유지한 가운데 한성개발과 아트건설의 약진이 돋보였다. 한성개발과 아트건설은 각각 3, 6위에 올랐고 지난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범양건설도 다시 9위로 톱10에 진입했다.

기성실적은 경남기업과 극동건설, 동일토건이 전년도에 이어 굳건한 1~3위를 유지한 가운데 우남건설과 도원이엔씨가 각각 4~5위로 순위를 비켰다. 여기에 지난해 10위권 밖에 있던 건우가 8위에 올라 나날을 끈다.

대전

계약액 2.8조원... 전년보다 19% 늘어

총청권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어 왔던 대전에서도 지난해에는 건설공사 계약금액 및 기성금액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 대전광역시회(회장 장성욱)가 전체 121개 회원에서 115개사가 제출한 실적신고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총 계약금액은 2조8074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2조3535억3000만원보다 19.3%(4539억5700만원) 증가할 수 있다. 기성금액 역시 지난해에는 2조2154억1800만원으로 전년도(2조1769억1500만원) 대비 1.8% 상승하면서 지난 2010년(2조2224억원)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다 2년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문의별 계약금액을 보면, 건축이 2조

573억7100만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토목 6354억7500만원, 조정 730억900만원, 산업환경 416억3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문의별 기성금액도 건축이 1조4927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목 5197억7300만원, 산업환경 1351억5300만원, 조정 677억3100만원 순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토목 기성액은 2013년(5560억1700만원)보다 줄었다. 공공발주가 절대적인 토목부문 기성액이 줄었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 신규 발주 물량이 감소세를 보인 결과로, 공공공사에 주력하는 중소업체들의 체감정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전체적으로 신규 계약 및 기성금액이 늘었지만 타지역에서 수주한 지역내 실적 상위업체들의 비중이 매우 커, 전반적인 지역 건설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중소업체들을 위한 소규모 공사 발주와 더불어 입찰 참가기회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실적신고 상위 20개 업체의 계약금액이 전체의 88%가 넘는 2조4726억4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성액 역시 20개사의 비중이 약 82.7%(1조8330억9300만원)에 이른다.

한편 계룡건설산업과 금성백조주택은 올해도 계약 및 기성금액 모두 1.2위를 차지했다.

계약·기성 모두 'UP'... 증가폭은 둔화

세종

세종지역 건설사들의 실적은 지난해에도 큰폭으로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협 충남도·세종시회에 따르면 세종지역 회원사들의 지난해 총 계약 및 기성금액은 각각 15% 이상 증가했다.

계약금액 경우 2013년 8866억2300만원에서 지난해 1조997억9000만원으로 19.4%(2131억6700만원)나 증가하며 1조원을 돌파했다. 토목 계약액은 2669억8300만원에서 2484억43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건축이 5034억5900만원에서 7276억7100만원으로 늘어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성액 또한 2013년(7634억3700만원)

대비 16.4%(1504억9800만원) 증가했다. 총 기성액은 9139억3500만원 규모로, 조경부문(1046억7200만원)만 소폭 감소한 가운데 건축(5384억8300만원)과 토목(2576억5500만원) 모두 늘었다.

업계는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건축부문의 호조로 실적 상승세가 유지됐으나 기반 시설 확충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이후부터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다수의 업체가 지역 내 물량만 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자체 발주물량이 감소하면 실적 또한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계약액 기준 업체 순위를 보면, 라인산업이 수위를 차지한 가운데 시티건설과 새한건설이 뒤를 이었다.

토목 계약액 2.46%↓... 건축 15.21%↑

충북

충북지역도 지난해 건설공사의 신규 계약금액과 기성금액은 2013년 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건협 충북도회(회장 김경배)가 352개사(전체 회원사 359개)가 신고한 실적신고 집계 결과, 2014년 신규 계약금액은 총 2조2075억8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3년 2조61억3200만원 대비 2014억5100만원(10.04%) 증가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지역 건설경기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종별로 보면, 토목공사 계약금액은 줄어든 반면 민간영역인 건축, 조경공사가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공공시장의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토목공사 계약금액은 7933억8200만원으로 2013년 8133억6700만원 대비 2.46%(199억8500만원) 감소한 반면, 건축은 2013년 1조1013억4600만원에서 지난해 1조2688억9800만원으로 15.21%(1675억5200만원)나 늘었다.

기성액의 경우에도 토목공사는 2013년 9165억2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7378억9200만원으로 20% 가까이 줄어든 반면,

건축공사는 1조1105억4800만원에서 1조3141억1500만원으로 18.33%나 증가했다.

그나마 산업환경공사 및 조경공사 계약금액이 전년도 대비 각각 84.07%(310억2400만원)와 41.93%(228억6000만원) 늘어 일부 상쇄효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건설사 간 '부익부 빈익빈'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회원사 상위 10%의 계약금액이 1조1288억원으로 전체의 51.13%를 차지하고 기성액 역시 1조2130억원으로 전체의 55.0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성액이나 계약액이 제로(0)인 업체도 각각 13개사와 1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부동산 경기가 일부 회복세를 보였으나 공공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난은 여전하다며, 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공공공사 물량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체별 실적 순위를 보면, 대원과 원건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각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 2013년 7~8위였던 두진건설과 일진건설산업이 3~4위로 몰라서 눈길을 끌었다.